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북·일 관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발행인 : 하태형

편집주간 : 한상완

편집위원 : 주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북·일 관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                           |    |
|---------------------------|----|
| Executive Summary .....   | i  |
| 1. 급진전 중인 북·일 관계 .....    | 1  |
| 2. 북·일 대화 재개 배경과 전망 ..... | 2  |
| 3. 북·일 관계 개선의 영향 .....    | 4  |
| 4. 시사점 .....              | 9  |
| <b>【HRI 경제 통계】</b> .....  | 10 |

## &lt; 요약 &gt;

## ■ 급진전 중인 북·일 관계

북·일 양국은 평양선언(2002. 9. 17) 채택 12주년을 앞두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를 계기로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등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비롯해 양국 간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도 가능하다. 북·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정세를 비롯해 남북 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양국 간 관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북·일 대화 재개 배경과 전망

북·일 국교정상화 논의는 1990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2002년 북·일 평양선언과 2004년 2차 북·일 정상회담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미해결로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양국 간 교섭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과 임기 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다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는 다소 진전이 있겠지만, 북핵 문제 미해결, 주변국 정세 등으로 단기간 내 양국 국교정상화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스톡홀름 합의' 적극 이행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진전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일본의 對北 경제 제재도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납북 일본인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별개임을 강조해,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북·일 국교정상화의 경우 북핵 문제는 물론 주변국 합의 등이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사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 북·일 관계 개선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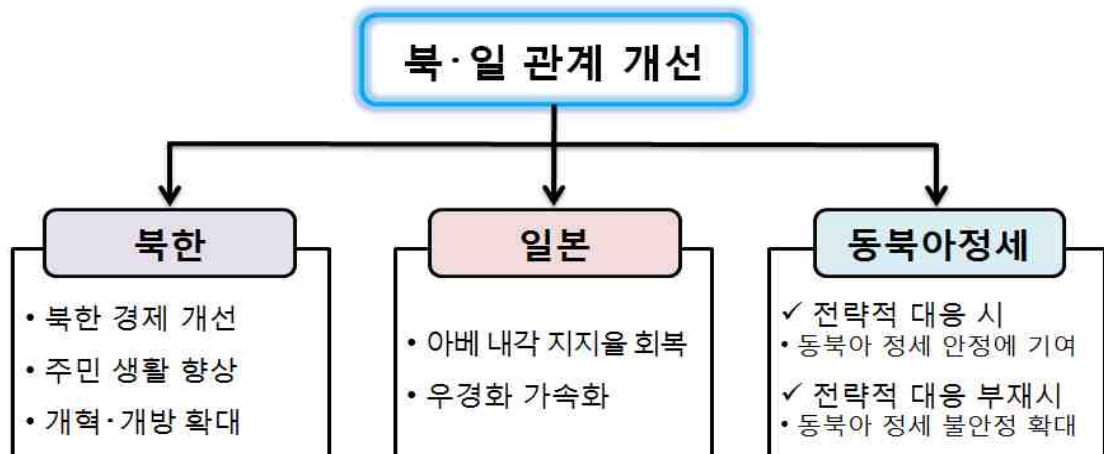
납북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과 일본에는 다음과 같은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첫째, 북·일 교역 재개로 북한 경제 회생과 주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역 재개 시, 북·일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약 2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2013년 북한 GDP 300억 달러의 약 7% 수준이며, 2013년 남북 교역액 11억 달러보다 많아, 북한 경제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공업 제품 수입 확대는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對北 ODA 지원 확대 시 북한 산업 인프라 개선 및 경제특구 개발이 크게 진전될 수 있다. 북·일 관계 진전 시 약 17억 달러로 추정되는 인도적 차원의 對北 공적개발원조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 이는 2014년 북한의 예산 71억 달러(통일부 추정)의 23.9%로, 북한 경제 재건과 지방급 경제특구 개발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북·일 인적 교류 확대는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만경봉호 운항 재개로 연간 1만 5,000명 이상의 북한주민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 회복을 비롯해 일본 내 우경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의 숙원 과제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시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따른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 확보는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 기조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일 관계 개선은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정책 대응이 부재할 시에는 동북아 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북일 관계 개선이 미치는 영향 >



■ 시사점

북·일 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한반도 정세 안정 등의 긍정적 영향은 물론, 남북 교류 협력 위축 등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어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북·일 관계 개선이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다자간 공조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 확대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화 노력 확대로 남북 관계가 더 이상 경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 간 신뢰와 동질성 회복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가올 인천 아시안 게임을 비롯해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남북 경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단된 경협사업의 재추진 등을 통해 통일비용 절감은 물론 동북아 정세 안정을 꾀해야 한다.

## 1. 급진전 중인 북·일 관계

- 북·일 양국은 평양선언<sup>1)</sup> 채택 12주년을 앞두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를 계기로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등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
  - 최근 북한과 일본은 스톡홀름에서 당국자 회담을 열고 일본인 납북자 관련 재조사와 함께 일본의 對北 제재 일부 해제에 합의
    - 2006년 북한 1차 핵 실험 이후 북·일 관계는 사실상 단절됐지만, 최근 납북자 문제 해결에 관한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
  -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비롯해 양국 간 국교정상화 교섭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스톡홀름 합의’ 이후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했고, 일본도 對北 송금 허용 등 독자적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
    - 한편 아베 총리도 임기 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방북할 수 있음을 밝혀 북·일 간 정상회담에 따른 북·일 국교정상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북·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정세를 비롯해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양국 간 관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최근 북·일 관계 개선의 배경을 살펴보고, 양국 관계 개선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 최근 북일 관계 주요 일지 >

| 구분          | 주요 내용  |
|-------------|--|
| 2014. 5. 29 | - 북·일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 (스톡홀름 합의)<br>· 北, 납치문제 전면적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br>· 日, 북한의 조사 개시 단계에서 일본의 독자적 對北 제재 해제 검토<br>· 양국 국교정상화 추진 의사 확인 |
| 2014. 7. 4  | - 북한,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개시<br>- 일본, 독자적 對北 제재 일부 해제 (인적왕래, 對北 송금 허용)   |
| 2014. 7. 5  | - 일본, 북한과 핫-라인 구축 추진   |
| 2014. 7. 10 | - 북한, 일본에 복수의 납치피해자 생존 통보  |
| 2014. 8. 22 | - 일본, 돗토리현 시장 대북제재 해제 이후 최초 방북   |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1) 북일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가 사상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합의한 공동문서임. 주요 내용으로는 식민지 지배 사과, 경제협력 보상,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이 특징임.

## 2. 북·일 대화 재개 배경과 전망

-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미해결로 양국 간 관계 개선은 큰 진전이 없었음
  - 2002년 평양선언 이전 : 1990년 일본의 '3당 공동선언'과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활성화됐으나,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정체
    - 1991년 1월부터 북·일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한 양국 간 협상이 개시됨
    -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일본은 쌀 50만 톤과 對北지원 및 회담 재개에 합의했으나, 1995년 남북회담 결렬 등의 이유로 강경입장으로 선회
  - 2002년 평양선언 이후 : 2002년 평양선언으로 북·일 국교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관계 경색
    - 2002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관계 진전과 북·미 대화 재개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선언'에 합의
    - 2006년 북경에서 3-track(납치, 안전보장, 국교정상화)실무 회담을 개최했으나,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1차 핵 실험으로 난항을 겪음

< 2002년 평양선언 전후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 >

| 시기                     | 주요내용   |
|------------------------|--|
| 평양선언 이전<br>(1990~2001) | - 1990년 일본 자민·사회·노동 '3당 공동선언' 합의<br>· 전후 사죄 및 보상, 국교정상화교섭 재개, 교류확대 등<br>- 1991~92년 8차례 국교정상화회담<br>- 1994년 제네바 합의 계기로 북일 간 교섭 재개<br>- 1998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일본 강경입장 선회   |
| 평양선언 이후<br>(2002~2013) | - 2002년 북·일 평양선언 합의 (日고이즈미 총리, 北김정일 위원장)<br>· 평양선언 : 식민지 지배 사과, 경제협력 보상, 국교정상화교섭 재개 등<br>- 2004년 2차 북·일 정상회담<br>· 평양선언 재확인 및 납북자 5명 귀국, 교섭재개 전기 마련<br>-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으로 정부 간 협의 완전 중단<br>- 2008년 북·일 국장급 회담 (對北 제재 일부 해제)<br>- 2012년 북·일 적십자 접촉 및 과장급 회담 개최<br>- 2013년 아베총리, 재임 중 납북자 문제 해결 강조 |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 (북·일 대화 재개 배경)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와, 임기 내 납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이해가 일치

- 북한 : 3차 핵 실험 이후 제재국면 전환과,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對北 경제 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확보로 경제난 극복의 기반을 마련
  - 정치·외교적으로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통해 3차 핵 실험 이후 한·미·중이 참여하는 현재의 고립 상황을 탈출할 국면 전환의 의도
  - 경제적으로는 對日 교역 재개, ODA 등 경제지원을 통한 경제난 해소,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함
- 일본 : 대내적으로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통한 자민당 집권 기반 강화를, 대외적으로는 한·중 견제와 한·일 간 외교 주도권 확립을 위함
  -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숙원 과제인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혀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평화헌법 개정을 위함
  - 군사·외교적으로는 최근 영토분쟁에 따른 한·중에 대한 견제와 외교 고립 탈피, 북한문제에 있어 한·일 간 외교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함

○ (향후 전망)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은 있겠지만, 북한 핵 문제 미해결로 단기간 내 양국 국교정상화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스톡홀름 합의' 적극 이행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진전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일본의 對北 경제 제재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일본은 납북 일본인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별개임을 강조해,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 반면 북·일 국교정상화의 경우 북핵 문제 해결, 주변국 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북·일 관계 개선 배경과 전망 >

| 구분    | 주요 내용   |
|-------|---|
| 논의 배경 | - 북·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통한 '외교 고립 탈피' 이해관계 일치<br>· 北, 국제사회 제재 국면 완화, 일본의 경제 제재 해제로 경제난 극복<br>· 日, 동북아 외교 고립 극복, 납북자 문제 해결을 통한 국내 정치 기반 강화 |
| 향후 전망 | - 납북자 해결은 큰 진전, 북핵 문제로 단기간 내 국교정상화 실현은 한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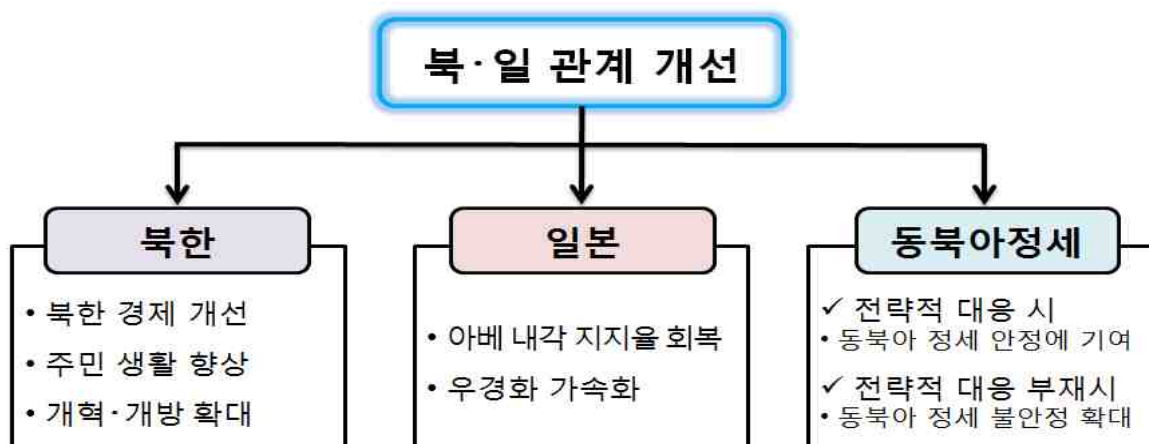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 3. 북·일 관계 개선의 영향

- 남북자 문제 해결을 통한 북·일 관계 개선은 당사국은 물론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북·일 '스톡홀름 합의' 이후 북한의 일본인 납치 조사 착수에 따라 일본은 對北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
    - 첫째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둘째는 양국 간 인적 왕래(북한 여행 포함), 셋째는 10만엔 이상의 현금 반출 및 300만엔 이상의 對北 송금을 허용
  - 남북자 문제 해결이 가속화 될 경우, 북한은 對北 제재 해제에 따른 경제 희생 기반 마련을, 일본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 회복 등을 확보
    - 북한 : 만경봉호<sup>2)</sup> 입항 허용에 따른 북·일 교역 재개, 인적교류 확대를 비롯해 일본의 인도적 차원의 對北 공적개발원조(ODA)<sup>3)</sup> 실시 등도 가능
    - 일본 : 아베 내각의 지지율 회복을 비롯해 일본 자민당 우경화 가속화
  - 동북아 정세는 전략적 정책 대응 유무에 따라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미·일 공조 약화 등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존재

< 북일 관계 개선이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2)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 원산과 일본 니가타(新潟)항 사이를 오가며 북송 교포 및 조총련대표단과 화물을 운송하는 북한의 화객선 중 대표적인 선박임. 2005년 기준(일본 니가타 항만사무소 자료) 북일 교역에 따른 수송화물 실적은 2,048만 톤, 수송인원은 4,600 여명에 달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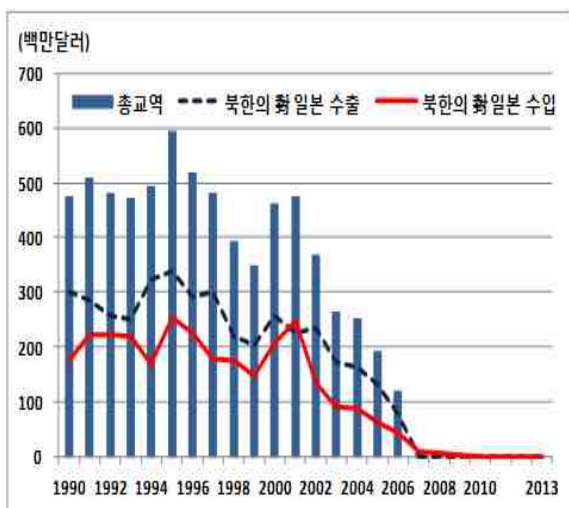
3)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은 기타 저소득국(GNI<\$ 1,005)로 분류됨. 對北 ODA는 EU 등이 주로 실시 중이며, 식량, 교육, 경제 기반 건설 지원의 명목으로 지원됨.

① 북한에 미치는 영향

○ 교역 재개를 통한 북한 경제 회생과 주민 생활 향상

- 북·일 간 총 교역액은 연간 약 2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1995년 북·일의 총 교역액은 약 6억 달러(비중 29.0%)로 일본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었지만, 2006년 북한 핵 실험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중단
  - 향후 북·일 관계 개선 지속으로 양국 간 교역이 재개될 경우, 북·일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약 20억 달러<sup>4)</sup>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음
  - 이는 2013년 북한 GDP 300억 달러의 약 7% 수준이며, 2013년 남북 교역액 11억 달러보다 많아, 북한 경제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경공업 제품 수입 확대는 북한 주민의 생활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과거 북한의 對 일본 수입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차량, 전기기기, 기계류, 생필품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음
  - 이러한 특징은 북·일 교역 재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수입 확대는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음

< 북일 간 교역 추이 >



자료 : 일본 통계청(<http://www.e-stat.go.jp>).

< 북한의 對 일본 주요 수입 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   | 1990           | 1995           | 2000           | 2005          |
|---|----------------|----------------|----------------|---------------|
| 1 | 기계류<br>(58.8)  | 직물<br>(23.8)   | 차량<br>(42.4)   | 차량<br>(26.9)  |
| 2 | 전기기기<br>(20.9) | 기계류<br>(21.5)  | 전기기기<br>(32.1) | 전기기기<br>(4.8) |
| 3 | 직물<br>(14.6)   | 전기기기<br>(18.3) | 직물<br>(23.7)   | 기계류<br>(4.1)  |
| 4 | 차량<br>(13.0)   | 섬유<br>(16.7)   | 기계류<br>(18.5)  | 섬유<br>(2.7)   |
| 5 | 철강<br>(12.1)   | 차량<br>(16.4)   | 석유<br>(10.1)   | 직물<br>(2.0)   |

자료 : 일본 통계청(<http://www.e-stat.go.jp>).

4) 2013년 북한의 총 교역액 73억 달러를 기준으로 1995년 29.0%의 비중을 유지한다고 가정.

○ ODA 지원을 통한 산업 인프라 개선 및 경제특구 개발 가속

-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급진전 될 경우, 약 17억 달러로 추정되는 인도적 차원의 對北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지원될 수 있음
  - 2004년 제2차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부 일본인 납북자가 일본으로 귀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對北 경제적 보상이 없었음
  - 납북자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의 對北 경제 지원 실시가 예상되며, 금액은 약 17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 일본의 對北 공적개발원조는 무상원조, 기술협력, 유상원조 방식으로 지원될 것이며, 주로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건설 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
  - 최근 북한은 농업과 기업소 부문의 인센티브와 자율권 확대 등 새로운 경제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일본의 경제지원은 이런 개혁을 가속화할 것임
- 일본의 對北 ODA 지원은 북한 경제특구 개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본이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ODA자금 17억 달러는 2014년 북한의 예산 71억 달러(통일부 추정)의 23.9%로, 북한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17억 달러의 對北 ODA가 지원될 경우 총 투자액 16억 달러 규모의 북한의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나아가 북·일 관계 개선 지속으로 양국 간 국교정상화가 실현된다면, 약 110억 달러)로 추정되는 對北 배상금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2012년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 ODA 규모 > < 북한의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현황 >

(단위 : 억 달러)

|        |      |      |     |     | 주요 내용 |                                  |
|--------|------|------|-----|-----|-------|----------------------------------|
|        | 베트남  | 캄보디아 | 몽골  | 미얀마 | 지역    | - 총 13개 (북중 접경 5개, 서해 3개, 동해 5개) |
| ODA 규모 | 16.5 | 1.8  | 1.1 | 0.9 | 주요산업  | - 관광휴양, 무역, 경공업, 수출, 농업 등        |
| 무상원조   | 0.2  | 0.8  | 0.5 | 0.5 | 면적    | - 총 개발면적 44.3km <sup>2</sup>     |
| 기술협력   | 1.5  | 0.6  | 0.3 | 0.4 | 총 투자액 | - 15.9억 달러 (개발구당 평균 1.2억 달러)     |
| 유상원조   | 14.8 | 0.4  | 0.3 | 0.0 |       |                                  |

자료 : 일본 외무성, 『2013년 일본 ODA 백서』. 자료 :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투자제안서.

5) 2012년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제공한 ODA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인 베트남(16.5억 달러) 수준을 북한에 지원했을 경우를 가정.  
 6) 일본의 對北 배상금 추정은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총 8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토대로 계산하였음. 현재 기준 일본의 對北 배상금은 일본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약 112.4억 달러로 추산됨(100엔/달러 ÷ (2012년 99.9÷1965년 25.6×2,880억엔)).

○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 개혁·개방 확대

- 만경봉호 운항 재개 등으로 연간 1만 5,000명 이상의 북한주민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1990~2005년까지 북한주민의 일본 방문은 연평균 1만 3,000여명에 달했지만, 2006년 북한 1차 핵 실험으로 인적교류가 크게 축소
- 북·일 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확대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② 일본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정부의 숙원 과제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시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경화도 가속화될 것임
-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주요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향후 납북자들의 귀환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집권 후 최저 수준(40%대 초반)인 지지율 상승효과가 기대
- 특히 과거 2002년,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두 차례 방북으로 일본인 납북자를 귀국시켜 지지율을 단번에 만회한 사례가 존재
- 따라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따른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 확보는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 기조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음

③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 북·일 관계 진전이 지속될 경우, 관련국 간 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통일비용 최소화 등에도 보탬이 됨
- 남북관계 안정에 기여 : 북한 현안 문제 해결의 교두보 마련과 북·미 대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對北 정책 리스크 축소 : 북·일 관계 개선은 우리의 對北 정책 유연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 **통일비용 축소** : 북·일 교역 재개 및 일본의 對北 경제지원 확대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및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 등 통일비용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
- **부정적 영향** : 북한의 對日 의존도 확대에 따른 남북 관계의 상대적 약화를 비롯 남북 교류 협력의 위축, 통일 이익의 유출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
- **정부차원의 남북 간 관계 약화** : 북한이 일본과의 실리적 외교만 지향할 경우, 정부 차원의 남북 간 관계 약화가 우려
- **남북 민간 교류 협력 상대적 위축** : 북·일 교류 협력만 강조될 경우, 남북 경협을 비롯 경제·사회적 남북 관계의 상대적 약화를 야기할 수 있음
- **통일 이익의 유출** : 경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에 경제 협력의 특권을 부여할 경우, 북한 경제 건설은 일본 표준 방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북일 관계 개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일 관계 개선,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li> <li>- 남북관계 안정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현안 문제 해결, 남·북·미 대화 여건 조성</li> </ul> </li> <li>- 對北 정책 리스크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한의 對北 정책 유연성 확대</li> </ul> </li> <li>- 통일비용 절감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경제 성장 기반 강화, 주민 생활 개선</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일 관계 개선, 전략적 활용 부재시</li> <li>- 정부차원의 남북 간 관계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對日 의존도 확대 (정치, 군사, 외교)</li> </ul> </li> <li>- 남북 민간 교류 협력 상대적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경협, 對北 인도적 지원 축소</li> </ul> </li> <li>- 통일 이익의 일본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표준으로 북한 경제 개발 시 통일비용 증가</li> </ul> </li> </ul>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④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북·일 관계 개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동북아 정세는 이전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나, 전략적 대응 부재 시에는 동북아 정세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음
- 북·일 관계 개선과 더불어 남북경협이나 남북 간 인도적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동북아 정세는 이전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 부재 시에는 남북 관계의 상대적 약화 등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상존

#### 4. 시사점

- 북·일 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한반도 정세 안정 등의 긍정적 영향도 기대되나, 남북 관계의 상대적 약화 등 부정적 영향도 상존하므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정책 대응이 필요
  - 첫째, 북·일 관계 개선이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다자간 공조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북·일 관계만 개선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의 발전 동력 상실을 비롯해 한·미·일 對北 공조 균열이 가속화 될 수 있음
    - 이에 우리 정부는 동북아 정세 안정과 6자회담 동력 확보를 위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 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남북 고위급 접촉 확대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북·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칫 북한의 對 일본 의존도만 높아질 수도 있음
    - 따라서, 남북 고위급 회담 정기 개최 등 정부차원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셋째,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 간 신뢰와 동질성 회복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 학술 교류를 비롯해,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로 남북 간 경색 국면을 완화해야 함
    - 특히 다가올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을 비롯해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제안 등을 통한 남북 간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
  -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남북 경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단된 경협 사업의 재추진 등을 통해 통일비용 절감은 물론 동북아 정세 안정을 꾀해야 함
    -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르는 북한 경제의 對日 의존도 심화는 일본식 표준에 따르는 북한 개발로 이어져, 통일 비용의 확대를 유발할 수 있음

미래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2072-6222, yhlee@hri.co.kr)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 구분             | 2012       | 2013       |        |       |       |        | 2014  |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연간(E) |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2.3        | 2.1    | 2.7   | 3.4   | 3.7    | 3.0   | 3.9   | 3.6   | 3.6   |       |
|                | 민간소비(%)    | 1.9        | 1.7    | 2.1   | 2.1   | 2.2    | 2.0   | 2.5   | 1.5   | 2.5   |       |
|                | 건설투자(%)    | -3.9       | 1.9    | 9.8   | 8.8   | 5.4    | 6.7   | 4.3   | 0.4   | 2.6   |       |
|                | 설비투자(%)    | 0.1        | -12.7  | -3.9  | 1.5   | 10.9   | -1.5  | 7.3   | 7.9   | 5.4   |       |
| 대외거래           | 경상수지(억 \$) | 508        | 105    | 208   | 238   | 248    | 799   | 151   | 241   | 790   |       |
|                | 통관기준       | 무역수지(억 \$) | 283    | 56    | 144   | 108    | 133   | 441   | 52    | 151   | 455   |
|                |            | 수출(억 \$)   | 5,479  | 1,353 | 1,412 | 1,368  | 1,464 | 5,596 | 1,376 | 1,460 | 5,836 |
|                |            | 증감률(%)     | (-1.3) | (0.3) | (0.7) | (2.8)  | (4.7) | (2.1) | (1.7) | (3.4) | (4.3) |
|                |            | 수입(억 \$)   | 5,196  | 1,297 | 1,268 | 1,260  | 1,331 | 5,156 | 1,324 | 1,309 | 5,381 |
| 증감률(%)         | (-0.9)     | (-2.9)     | (-2.8) | (0.3) | (2.5) | (-0.8) | (2.0) | (3.3) | (4.4) |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 1.6        | 1.2    | 1.4   | 1.1   | 1.3    | 1.1   | 1.6   | 1.7   |       |       |
| 실업률(%)         | 3.2        | 3.6        | 3.1    | 3.0   | 2.8   | 3.1    | 4.0   | 3.7   | 3.6   |       |       |
| 원/달러 환율(평균, 원) | 1,127      | 1,085      | 1,123  | 1,111 | 1,062 | 1,095  | 1,069 | 1,029 | 1,030 |       |       |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